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 경위

- 발의일자: 2024. 2. 8.
- 발 의 자: 김종일 의원 외 4명
- 회부일자: 2024. 2. 14.(의안번호 제518호)
- 검토기간: 2024. 2. 15. ~ 2. 18.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7조)
- 민간전문가 활용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8조~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조, 제49조
- 「청년기본법」 제3조, 제4조, 제21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나. 입법예고: 2024. 2. 15. ~ 2. 20.

다.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⁴⁾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지원사업의 방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두루 반영되었고 각 조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을 용어 정의⁵⁾의 형식으로 구체화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필수적인 사항을 제시한 후 법정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지원계획 수립에 앞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안 제7조의 지원사업에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⁶⁾된 복지서비스가 대부분 포함되었는데, 특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 필요성을 1년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매우 적절해 보임.
- 전국의 사례⁷⁾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조례는 대구·경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간병 살인의 비극(붙임 자료 참조)을 생각하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시행 준비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임.

4)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안 제3조)이며, 1990년대 이후 영국·호주·일본 등에서 논의된 '영 케어러(Young Carer)'나 종래의 '소년·소녀 가장'과는 그 대상 범위가 다소 다를 수 있음.

5)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인데 '가족'은 「민법」, '저소득'은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청년'은 「청년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 것임.

6)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2022. 2. 14.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돌봄·생계·진로의 중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7) 2021년 부산 중구의회가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한 이래 전국적으로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돌봄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

□ '간병 살인' 관련 언론보도 자료

영남일보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027면 사설·칼럼

대구서 또 '간병 살인' 비극...분명한 '국가의 책임'이다

오랜 가족 간병을 견디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른바 '간병 살인'이 대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었다. 이 아들은 8년 동안 홀로 아버지 간병을 해 왔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남구에서도 뇌병변 1급 장애 아들을 흥기로 살해한 60대가 붙잡혔다. 2021년엔 20대 아들이 뇌졸중 환자인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이들 사건을 단순한 '존비속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간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 달서구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생전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이력이 없

었으며, 달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도 등록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얘기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오랜 간병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궁지에 몰아넣는다. 이로 인해 가족 간 불화를 넘어 살인 등 비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갈수록 무력해지는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간병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 책임 돌봄 입법화'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지자체도 간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라. 자칫 손 놓고 있다간 우리 사회가 '간병 지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